

‘생중계 업무보고’ 정쟁화 비판에 “행정-정치 명확히 구분”

인천공항 사장 공개질타 비판에
李 대통령 “색깔로 불이익 줬나
지휘·명령하고 따르는 행정영역”

韓 국민, 부당·불투명 용인 안 해
생중계 리스크, 감당 의지 보여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부처 ‘생중계’ 업무보고가 정쟁을 불러오고 있다. 애초 이 대통령은 ‘투명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생중계를 결정했고, 실제로 생중계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도 많다. 그러나 만기친람식 업무보고가 불필요한 정쟁을 불러온다는 비판도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 것을 놓고 “여기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며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갖고 불이익을 줬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분명한 것은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영역인데 왜 그런 걸 악용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과정에서 책을 사용해 외화를 불법 반출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야당 정치인 출신인 이학재 사장에게 질문한 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공개 질책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야당 3선 의원 출신이자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게다가 이 사장은 업무보고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지적한 사안을 반박해 해당 사안이 정쟁으로 번졌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체계 속 사람들 간에 서로 보고하고, 보완하는 자리”라며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줬나.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한 소관 기관을 다시 언급했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세관과 MOU를 체결하고 공항공사의 ‘경비·검색범위’에 ‘미화 1만달러 초과외화’를 포함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 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업무는 세관 소관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질문했더니 관

세청장이 공항공사가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MOU(양해각서)를 맺고 위탁을 했더라”라며 “1만불(달러)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한다는 것을 기사 댓글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이어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 가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나중에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댓글을 보다가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 하는 댓글이 있더라”라며 “대중들은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강조해도 가끔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든 사람들이 있다”며 “1분 전에 얘기한 것과 1분 후에 얘기한 게 다른데,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고 꼬집었다.

또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책갈피에 달라를 숨겨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범죄 수법을 언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년도에 어디에서 보도됐고 1만달러 이상 반출하다가 걸린 게 보도자료에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옛날부터 있는 건데 뭘 새로 가르치나. 일부가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쉬쉬하면서 기회를 주란 말이나”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는 댓글도 있더라.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라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생중계 부처보고로 인해 종합적인 정책 기초가 아니라 ‘달라’ ‘탈모’ ‘환단고기’만 남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통령의 꼼꼼한 지적이 공식사회에 긴장감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만기친람이 ‘복지부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에도 반박 논리를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에 대해 “국민은 집단지성을 통해 다 보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걸 용인하지 않는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생중계로 인한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생중계는 부처 관계자들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보고를 받고 여러 사안을 챙기는 이 대통령이 더 큰 리스크를 지고 있다. 본인이 한 말실수에 대한 비판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정청래 “외교부-통일부 갈등 진실 아냐… 통일부 방침 지지”

강원 춘천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대북 주도권 둘러싼 부처갈등 부인

“文 정부 때 한미워킹그룹 대한 우려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 조속 설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 내 외교부·통일부 간 갈등설에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최근 외교부 주도의 ‘한미 외교당국 협의체’에 불참한 것을 두고 “통일부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통일부가 한미정례회의 하루 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향간의 언론 보도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한·미 외교당국이 정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적인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하루 전날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간 통일부 일각에서 이 협의체가 대북 제재 심의 기구로 작동했던 ‘한미 워킹그룹’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 이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최근 통일부가 한미정례회의 하루 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향간

의 언론 보도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다. 저는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 “민주 정부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한미 대북 정책 조율 정례회의를 비판하는 성명 발표했다”며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문제를 펴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쫓고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모두발언 후 추가발언을 통해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통일 정책·남북 관계·한반도 평화는 통일부, 국가 안보·국방 정책은 국방부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며 “통일부는 남북 관계·한반도 평화를 주무 부처로 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대미·대북 정책을 조언하는 당내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조언을 하는 당내 특별기구 가칭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해서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익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李 대통령, 석유공사 ‘대왕고래’ 수익성 검토부실 질타

석유공사 “배럴당 생산원가
변수 많아 정확한 수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와 관련해 수익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취지로 “계산을 하지 않았느냐”고 한 국석유공사를 질타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술탈취’와 관련해 과징금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

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계산했을 때 배럴당 생산원가 추산이 어떻냐”라고 물었다.

최문규 직무대행이 “계산은 해봤지만 정확한 수치를 안 갖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산해봤나”, “계산을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해 보지 않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재차 “계산을

안 해봤나”라며 “변수가 많으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업성과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에 수천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나”라며 “그러니까 가능성을 잘 봐야한다. 계산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해보는 이야기다. 아무데나 다 파냐”라고 질타했다.

최 직무대행이 “탐사는 정확하게 계산한다. 거기는 탐사광구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추

산도 안 해봤나”라고 다시 물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계속 일어나는 데 대해선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20억원 얘기했었나. 이거 너무 싸다”면서 “기술탈취해서 1000억원 벌었는데 과징금 20억 해봐야 나 같으면 막 흠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는 과징금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형사처벌 만능주의인데, 처벌은 별로 실효가 없다”며 “잡기도 어렵고,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들어서 맨날 인력 부족 얘기하고, 처벌 해봐도 집행유예 되면 실질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범죄 관련해서 과징금이 적고, 형사처벌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다. 노동현장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나, 개인정보 보호 소홀 등 문제에 대해 ‘회사가 망할 정도’로 과징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니까,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 아니면 ‘당해 기술탈취로 얻은 것의 몇 배’ 이렇게 해야 실제 제재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것은 별도로 재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예진 기자